

북한개발의 국제화, 그리고 남북경협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hzang@hanyang.ac.kr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북미협상이 타결되고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북한개발’이라는 이슈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화두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개발의 오지이며, 인구가 2,500만명이 넘어서 무시할 수 없는 개발지로 평가된다. 게다가 소득수준에 비해서 인적자원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간다면 고속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 북부의 개발은 멀리 유럽, 대양주, 미주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IBRD)에 가입을 신청할 것이다. 북한이 IMF와 IBRD에 가입하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세계은행그룹 소속 국제금융기구들(MIGA, IFC)의 회원국도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미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당연히 이들 국가와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도 무상이나 매우 양허적인 조건으로 자금지원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국제민간부문의 직접투자(FDI)도 북한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인정해준다면,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대북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규모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개발의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큰 그림에서 북한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개발이라는 화두는 오랫동안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과 동일시되어 왔다. 신규 남북경협사업이 금지된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우리는 갈수록 밀접해지는 북한과 중국간 경제협력을 지켜봤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남북경협이나 북중경협은 연간 수억달러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북한개발이 국제화되는 그때가 되면, 한반도 북부에서 북한개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는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수많은 국가의 ODA 공여기관들, 국내외 민간투자자들 등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증가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플레이어와 협력하면 된다. 반면에 북한개발 과정도 국제기준, 국제관례 및 국제모범사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개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규범을 관장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소속된 국가들이 북한개발에 다수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규범의 적용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DAC의 회원국이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에서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은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무역이 급증하게 되면 남북간 무관세 관행은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북한개발에 드는 비용은 급증하는데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출하지 않고 남북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앞세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의로 지출하는 방식도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결국 남북간 무관세 관행을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합법화시키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틀 속에서 북한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부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변화된 북한개발의 패러다임하에서 우리가 민족을 앞세우지 않고도 북한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나 개혁이 제자리를 찾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 개혁과 이에 따르는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는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국제규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이 어떠한 경로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는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